SKY 인문계 쏠림 심화… 모의지원 46%↑

서울·연세·고려대 정시 모의지원 분석
인문 45.9% 증가, 자연 1.8% 감소
사탐런 영향… 인문계열 경쟁 심화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최상위권 인문계열로 수험생이 몰리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일 진학사가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정시모집을 대상으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지원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인문계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지원은 실제 원서접수 이전 단계에서 수험생들의 초기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세 대학에 접수된 모의지원 건수(예체능 제외)는 동일 시점 기준 4만7393건에서 5만988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계열별 흐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인문계열 모의지원은 전년도 1만4206건에서 2만723건으로 45.9%나 늘어난 반면, 자연계열은 2만9172건에서 2만8652건으로 1.8% 감소했다. 선발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인문계열 쏠림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모의지원 건수를 모집인원으로 나눈 경쟁률을 살펴봐도 흐름은 뚜렷하다. 인문계열은 8.24에서 12.07로 46.5% 상승해 경쟁이 크게 치열해진 반면, 자연계열은 오히려 4.8% 감소했다.

특히 대학별 데이터를 보면 인문·자연 간 이동 격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모두 인문계열 모의지원이 일제히 증가한 반면 자연계열은 정체하거나 감소해 계열 간 관심도가 뚜렷하게 양극화된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사탐 응시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사회탐구 선택자가 크게 늘면서, 과탐 응시가 필수이거나(서울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는 지원이 쉽지 않다.

반면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자연계 수험생 일부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세대는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세 대학 중 인문계열 모의지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학별 인문계열 모의지원 증가율은 고려대 40.4%, 서울대 36.3%, 연세대 60.2%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소프트웨어대전서 투자유치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홍보부스 열고 주요 개발사업 알려

고양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AI × SoftWave 2025)'에 참가해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창릉3기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SW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이자 아시아 대표 SW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은 소프트웨어, IT 분야 350여 개 기업·단체가 약 550개의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패키지 SW, IT 서비스, 융합 SW, 인터넷 SW, 게임/콘텐츠 SW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 등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핵심 산업인 콘텐츠·소프트웨어·IT 분야 국내외 기업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IR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시회인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과 11월에 개최된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 '2025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서도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상담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여의도에서 '2025 고양특례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투자환경 전반을 안내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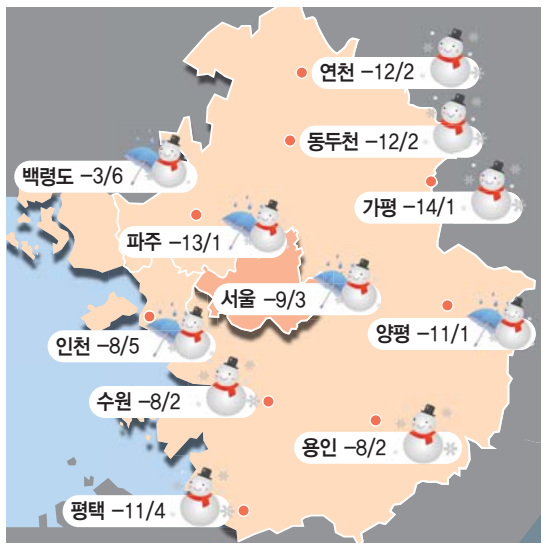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1 | 해짐 / 17:14

12월 4일 (木)
음력 : 10월 15일

수도권 날씨
-9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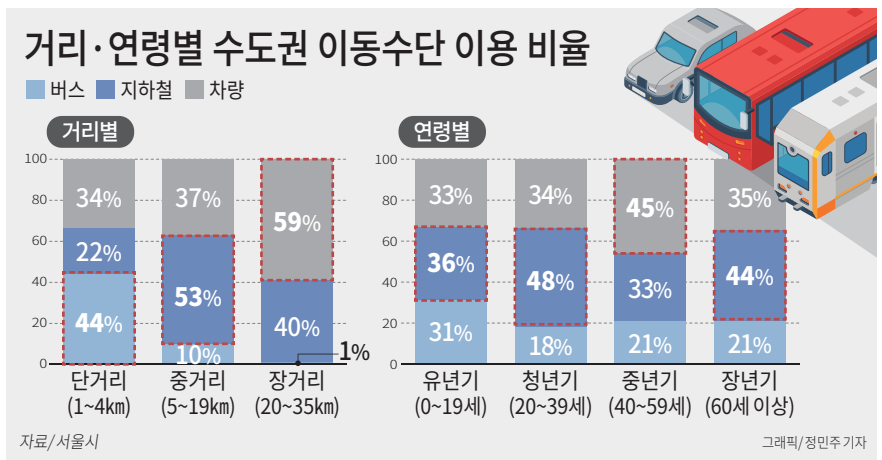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단거리는 버스, 중거리는 지하철로 도시·교통정책, 빅데이터로 그린다

서울시, 수도권 시민 이동패턴 분석
거리·연령·지역별 교통이용 달라
청·장년 지하철, 중년층 차량 이용
빅데이터·AI 기반 도시혁신 선도



수도권 시민의 이동 패턴이 거리·연령·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거리는 버스, 중거리는 지하철,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두드러졌고, 청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장년층은 다시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서울·경기·인천 간 이동 수단 비중 역시 크게 달라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과 차량 중심의 경기·인천이 대비됐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동 거리와 지역, 연령대에 따라 교통수단 선택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시와 KT가 공동 구축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250×250m 크기의 4만1023개 격자로 분할하고, 20분 단위로 이동량을 집계한 국내 최초의 통합 모빌리티 분석이다. 기존 시군구·읍면동(1186개 단위)보다 최대 35배 이상 세밀한 수준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이동 거리별로 뚜렷한 교통수단 선택 경향이 나타났다. 단거리(1~4km)는 버스 이용이 가장 많았고, 중거리(5~19km)는 지하철, 장거리(20~35km)는 차량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명확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 장년층(60세 이상)은 지하철 이용 비중이 다시 4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에서도 차이가 컸다.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서울 중심부는 지하철 접근성이 높고 직장·학교가 밀집해 있어 출근·통학 수요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이동은 차량 이용이 68~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데다 직주 근접도가 낮아 차량 중심의 통행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이 행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 이동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 교통정책 및 SOC 공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수도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주거·도시계획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AI·데이터 기반의 도시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예산 106조… 지역대학·AI 인재 육성

교육부 내년도 예산 106.4조 확정
대학육성·AI인재·유보통합 집중
영유아특별회계 등 재원운용 변화

교육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총 규모는 106조36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양성 ▲유보통합 추진 ▲특별회계 구조 개편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에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이라는 재정 구조 변화가 함께 이뤄지며 향후 교육 재원의 운용 틀이 크게 달라지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크게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양성 ▲유보통합 추진 및 보육환경 개선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학·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는 3조 1448억원 규모로,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점국립대학이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사립대·전문대의 학과 구조 개편 및 특성화에도 1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AI 분야 투자는 3348억원이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되며, AI+X 융합 부트캠프 10개교도 새롭게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해 지역별 AI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17개 AI 교육연구단과 AI 융합 연구단 3개도 뒷받침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다. 2026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해 4703억원을 투입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되며, 교육세의 60%가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를 통해 유아 무상교육·보육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2026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2027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지역대학 육성과 AI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에 투입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한국 '미국 착취 동맹국' 취급…내각회의 발언 논란
▲"'G7 회의에 中초청 검토' 프랑스에 日, 신중 대응 요구" /사진 뉴시스
▲'건강 이상설' 트럼프, 국무회의 중 또 스르륵… 백악관 "주의 깊게 경청"
▲日기업 9곳, 트럼프 '관세' 상대 소송…"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트럼프 "소말리아인은 쓰레기"…미네소타서 이민 단속 방침
▲日혼다·닛산·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 美서 공동 생산 검토